

# “과학기술 전문행정인력에 의한 국정운영 왜 필요한가”

## 과총·국회정보통신포럼·국회가상 정보가치연구회 공동주최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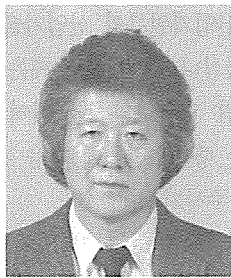
과총은 9월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정보통신포럼과 국회가상정보가치연구회 공동주최로 “과학기술 전문행정인력에 의한 국정운영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형섭 과총회장의 격려사, 정호선의원(국민회의)의 축사와 전무식 한림원장의 기조강연에 이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참석자

- ◇ 기조강연  
全武植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 ◇ 토론자  
李基俊 한국공학원 회장  
金明子 숙명여대 교수  
蔡永福 과총 과학기술정책연구위원장  
金均燮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  
權五甲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국장  
李萬儀 행정자치부 인사국장  
李祥羲 한나라당 국회의원
- ◇ 사 회  
金殷泳 과총 부회장

### 기조강연

## 고위직에 과학기술인력 늘리고 행정·기술공무원, 순환보직제를



全武植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그동안 많은 정권이 바뀌면서 그때마다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들의 과학기술 마인드 확산과 과학기술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부분에서의 변화와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고위직에 과학출신 확대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국가

의 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들의 역할입니다.

아시다시피, 현대의 정부정책에 대한 결정은 과학기술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과 소양을 갖추지 않고서는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 좋은 예를 우리는 경부고속철도와 시화호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 될 수 있는 과학기술적 검증 절차마저 거치지 않은 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졸속으로 추진된 국가의 대형 국책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부고속철도는 그 막대한 사업비는 차치하고서라도 당초의 공기에서 14년이 늘어났으며, 지난 85년부터 약 1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국내 최대의 담수호로 조성된 시화호는 이제 희생 불능 상태의 오염원으로 변해버렸습니

다. 얼마 전, 「월간 조선」의 통계에 의하면 금년 7월 현재 우리나라 전 정부부처에 근무하는 2급 이상 공무원중 대학에서 과학기술계통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정부 고위 공무원들의 전공을 직급별로 보면 과학기술계 출신의 점유율은 직급이 올라갈수록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계통 출신자는 과학기술부를 필두로 특정 부처에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교육부 등 국가의 주요부처 2급 이상 공무원 중에는 과학기술계통 출신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결국 국가의 모든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하여 그 현실성을 검토해줄 수 있는 과학기술분야 전문관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전문지식은 과기부나 교육

부 등 일부의 전담부서에서나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외교 통상에서 국가이익을 최대로 할 수 있는 협상에 임하려면 폭넓은 산업기술과 고급 과학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기술직 공무원이 하부직급에만 국한된 체제하에서 어떻게 첨단 기술이 관련된 통상마찰을 해소하고 탄산가스 규제같은 국제협약에 임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북한 경수로사업에 관련된 공무원중 '경수'와 '중수'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 소양을 갖춘 공무원이 과연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앞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결정자그룹에 과학기술계 인력이 매우 적다는 언급을 했으나, 단순히 과학기술계 인력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과학적 국가경영이 가능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변화를 내다볼 수 있는 인력을 얼마만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가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께서도 나와 계십니다. 저는 다음의 내용을 의원입법으로 제안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첫째, 고시과목에 과학기술 학과목을 필수로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술고시 합격자의 수를 증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직과 기술직 공무원의 차별이 없는 순환보직제를 과감히 실시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외부 고급인력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포 과학자들의 이중국적 허용문제는 물론, 과학기술자들이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모든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과학기술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여 과학기술 관련부처의 장·차관 및 국장, 산하 연구기관의 기관장 선임시, 업무수행과 경영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한 인사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공무원 문화개방을

또한, 이 자리에는 행정자치부의 인사국장과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정책국장,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국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이 분들에게는 우리 공무원들의 과학화와 관련하여 부처 장관 혹은 행정수반들께 다음 사항을 건의드리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무원 봉사기간중 꾸준한 과학기술 소양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의 자기발전을 위한 연수, 교육 등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제



▲ “과학기술전문행정인력에 의한 국정운영 왜 필요한가” 토론회 모습

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셋째, 과학기술직 공무원의 우대정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다변화 사회에서는 외교, 통상, 산업, 국방, 환경, 법조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과학 전문지식이 고도로 요구되는데 국가경영의 보람을 갖고 사회봉사를 할 수 있

도록 전문적 과학기술 인력을 채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으로 다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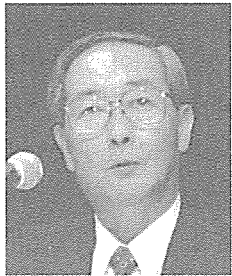
- (1) 기술직 공무원의 자격수당을 현실화하여야 합니다.
- (2) 기술직 공무원의 진급 문호를 개

방하여야 합니다.

- (3) 고위 직급에 과학기술 전문가가 더욱 많이 임용되어야 합니다.
- (4) 공무원 사회의 순환교류 근무를 통한 협조체제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 (5) 공무원 사회는 탄력성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토론

# 공무원들, 기술문화에 익숙해야 행정·사법고시과목에 과학 포함



李基俊  
(한국공무원 회장)

경제나 사람은 물론이고 사회복지문제를 다룰 때 모든 분야에서 전문화·정보화 또 세계화·개방화라는 것이 아주 필연적인 사실로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이런 전문화·정보화라든지 세계화·개방화는 과학기술의 뒷받침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을 우리 사회에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을 이끌어 주신 공무원 체제가 앞으로 큰 걸림돌이 되어

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인식입니다. 그동안 좋은 일을 해주시고 발전의 전인차 역할을 해 주셨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세상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과 같은 생각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 다녀온 친구 이야기를 들었더니 거기는 장·차관 밑에 기획관리실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관이 모든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책을 과학기술적인 안목으로 이것이 효율적이나 합리적이나, 앞으로 21C를 대비해서 이것이 타당하느냐를 조정하고 협의해서 끌고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과학기술이 그들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과학기술문화에 익숙해지고 또 과학기술문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역시 교육과 등용의 문이 그쪽으로 열려져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전무직원장이 지적해 주신 것 처럼 우리 공무원 사회가 왜 과학기술하고 유리되었느냐 이것은 채용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진급할 수 있는 길을 제대로 열어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시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법고시는 합격하면 별안간 3급 부이사관이 됩니다. 행정고시는 합격하면 사무관이 됩니다. 5급입니다. 시험을 보면 한쪽에서는 3급이 금방되고 한쪽에서는 5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 체계상으로 과거에는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주신 것은 분명합니다만 앞으로는 채용하는 방법과 진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나아가 저는 무엇보다도 고시과목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지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시과목을 어떻게 바꾸느냐? 과학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과학기술문화를 우리 공무원들이 리드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과학기술문화 리드해야

예를 들면 과학의 기원, 또 문명과 철학의 탄생, 또 르네상스와 문화 그리고 우주시대, 정보시대, 근대사회에서의 과학과 과학의 문제, 21C를 대하는 과학과 기술의 방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염두에 두는 과목입니다.

이것은 이공계 사람도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한테, 모든 국민한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리드할 수 있는 그

런 체제로 가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기술고시는 필요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고시나 사법고시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만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과학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육법전서만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기본적인 법칙 또 에너지효율, 엔트로피 이런 것을 다루어야 합니다.

또 물이나 공기, 지구, 화재와 관련된 화학, 폴리머라든지 우리 자동차의 엔진 속에서 일어나는 연소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뤄야 합니다. 의학과 건강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창의력입니다.

창의력을 어떻게 하면 더 키워가고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과목들은 인문사회계에 계신 분들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시과목에서 꼭 포함되어야 할 과목입니다.

토론

기술과 행정고시의 벽을 허물어  
이과 출신 공무원 문호개방을



金明子  
(숙명여대 교수)

98년 우리나라 국가고시에서 뽑힌 인력은 총 9백55명입니다. 기술고시로 뽑힌 인력은 48명 그래서 5%입니다.

그런데 대학을 보면 대학의 입학정원중 문과·이과 선발비율이 48 : 52로 52%가 넘는 숫자가 이과입니다. 이공

계 대학생이 많으니까 기술고시가 많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입학생 30만명중에 반 이상이 이공계인데 그중에 50명이 국가행정에 참여한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문제로 제기하고 싶은 것은 기술고시분야가 11개입니다. 그리고 각 분야마다 시험과목이 필수, 선택으로 매우 세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극히 세분된 분야에 일부 단편적인 지식의 시험을 거쳐서 11개 분야에서 평균 4명 정도가 뽑혔다고 했을 때 그 인력이 전반적인 행정업무에서 어떤 능력을 테스트 받았다고 느끼기가 어렵지 않겠는가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日선 문과·이과 구분안해

오늘의 과학기술분야는 굉장히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있어서 현재의 기술고시과목이 어차피 그 영역과 세부주제를 포함하고 있지 못합니다.

포함하지도 못하면서 매우 세분된 일부과목의 점수를 갖고 공무원이 되었을 때 승진을 하는데 있어서도 이것이 결국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행정고시과목의 경우 97년 현재 과학기술과 관계되는 분야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정업무를 하면서 과학기술 요소가 국가업무와 국정운영에서 매우 중요해졌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렇다면 이 기술고시, 행정고시라는 국가 인재의 최고의 등용문이 과연 그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가, 융통성 있는 체제라고 할 수 있겠는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까.

따라서 기술고시와 행정고시의 벽을

허물어 시험과목을 새롭게 개편, 조정 해서 틀을 새로 짜는 것이 정말 합당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학은 지금 학부제로의 변화 등 유례없는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얼마나 긍정적으로 나타날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상으로는 그렇게 가야한다는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시행상 많은 착오가 빚어지고 있는 조짐이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의 구조조정 특징이라는 것이 문과와 이과의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이과대학 내에서도 전공 구분을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학과의 벽을 허무는 한편 더 나아가서 문과·이과 단과대학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전부트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인재등용도 그 틀을 따라서 같이 개혁이 되어야 전 사회로 개혁이 퍼져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일본의 기술직 공무원 임용제도는 문과, 이과 할 것없이 공통으로 응시

를 하게 해서 문과출신은 사무관, 이공계 출신은 기관 또는 연구공무원 이런 식으로 통틀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만여명이 1년에 뽑히고 있는데 60%가 이공계 출신이라고 합니다.

한번쯤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도 고시과목 종류 뿐만 아니라 고시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 공무원의 활용을 통한 국정운영의 과학화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짚어봐야 할 주제입니다.

토론

# 국가 경제정책 입안·시행 과정에서 과학기술 전문인력 활용 필요



蔡永福

〈파총 과학기술정책연구위원장〉

앞으로 1년 3개월이면 새로운 밀레니엄이 열리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경제운영과 과학기술의 접목입니다.

특히 우리의 경제 하부구조가 제대로 확립된 위에 경제 지표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2~3년 전에 우리 정부는 우리 GNP가 2000년 초가 되면 3만달러 심지어는 8만달러까지 된다고 내다봤습니다.

그 결과 의식이 인플레이되어 근로자들은 임금을 올리려 했고 우리 산업의 하부구조의 포텐셜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과학과 기술의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 본질을 이해하고 또 미래의 것이 어떻게

변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오늘의 우리 기술수준, 우리의 제품수준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설교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없이는 아무 것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 과학기술자 대거 참여로

그런데 우리 정부의 경제운영정책을 입안해서 끌고가야 할 공무원중에 과학기술 소양을 가진 사람이 적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누가 그 부분을 커버해 줄 것입니까?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니까 결국은 지금 이런 경제를 가지고 3만달러, 8만달러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하루속히 시정이 되지 않고서는 안되겠고 이렇기 위해서는 경제운영에 과학자, 기술자가 대거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우선 한가지 방안은 경제전문가가 과학기술을 배우든가 과학기술자가 경제 문제에 대한 소양을 쌓든가 두가지 중에 하나인데 후자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자한테 경제소양을 키워서 그 사람들이 대거 경제를 기획하고 정책을 입안하는데 같이 동참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이공계 연구소들이 지금처럼 하드웨어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국가의 경제를 어떻게 설계했으면 좋은지 등 소프트웨어 연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은 GNP가 1백달러일 때 그 엄청난 KIST를 설립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하라고 하면 힘들 입장

인데 온 정력을 기울여서 KIST를 만들고 그 브레인들을 우리나라 공업의 현대화에 썼습니다.

4대 핵심공장 설계하는데 이들 브레인이 경제각료·경제인들과 같이 힘을 합쳐 오늘의 제철공업이 탄생했고 또 조선공업이 탄생했고 자동차공업이 탄생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러한 노력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권에 진입을 하고 다시 이런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산업분야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육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주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겠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면 GNP가 얼마가 될 것이다.’ 이런 막연한 계획은 이제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때가 아닌가 생

각이 됩니다. 제가 대충 두가지 방안을 말씀드리면서 과거를 돌아보면 과거에는 법대로 규제하던 행정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외국에서 쉽게 기술도입해 가지고 큰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계수에 밝은 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번성시켜야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경제각료들이 우리나라를 리드하는 시대였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다양화 되고 소량 다품종의, 또 지식에 기반을 둔 그러한 산업이 다시 열리는 이 시점에서 그런 방법으로는 더 이상 우리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경제를 기획하고 정책입안해서 시행하는 과정에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시대가 와야 됩니다.

토론

## 인사관리, 행정출신들이 독점해 기술계 공무원들은 푸대접 받아



金均燮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

우리가 IMF상황을 맞이하게 된 원인은 생산성 싸움에서 우리가 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생산성은 결국 사람과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생산성을 위해 노력한 것은 거의가 노동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이 자본의 투입이었습니다.

실제 경제성장에 기술이 기여한 부

분은 선진국에 비해 아주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기술이라는 것은 기업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경영에도 필요한 것이고 행정에도 필요한 것이고 국방에도 필요한 것이고 사회 각 분야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흔히들 WTO나 경제블록, 글로벌라이제이션 등 여러 가지 경제현상과 문제에 접하면서 기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본이라든지 노동은 이제 세계가 개방화되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됨으로 해서 국경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국경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 기술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기술의 중요성을 더더욱 강조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임원중에서 기술계 출신들은 약 50~60%입니다. 그런데 왜 정부부문은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

기술로써 IMF의 위기를 벗어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다 공감을 하면서 이 기술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사회 모든 분야에 어떻게 접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내에서 인력 자원의 배분을 결정하는 분들은 역시 인문사회계 출신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이 기술에 대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의 투자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출연연구소의 수를 보니까 인문계가 27개고 과학기술계가 34개입니다. 34개중에 평가관리라는 소위 평가계는 기술계라 보기 어려우니까 3개를 빼고나면 31개고 그중에서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5개입니다. 그것을 빼고 순수하게 개수를 구하면 26개입니다.

인문사회계가 27개이고 과학기술계는 26개라는 셈이 되는데, 지금까지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인문사회계통은 계속 분화를 해 왔고 과학기술계는 통합해 가는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기술에 대한 정부 내의 무지이자 소홀함이며, 하나의 문제로 지적되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 공무원 정기 보수교육 시급

그다음 행정계 내부의 기술계 인사의

운영면에서, 지금까지는 전문성을 보호하고 기술직 관료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일부 분야만 보임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이 승진하려고 하였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인사면에 불리한 처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상위직으로 갈수록 보다 폭넓은 소양을 경험해야 되는데 사무관때 한가지 업무만 했기 때문에 과장으로는 부적격하다. 과장에서 국장으로 갈 때 이것저것 안해봤기 때문에 국장시키기 곤란하다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술직에 대한 호칭문제도 사실은 홀대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고쳐진 것이 불과 4~5년 전인데, 여러 부문에서 일본이 주교간 제도를 지금 그대로 5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쓰고 있습니다.

행정직에서는 사무관, 서기관 이렇게 하고 기술직 공무원에게는 사무관이 기좌고 서기관이 기정, 부기감 이렇게 불리었습니다.

요즘은 기계사무관, 전자사무관 이렇게 바뀌어 졌지만, 이런 부분도 하나 생각해 볼만한 문제이고 기술직의 자리가 있는 부서에서는 주요 정책관리 상위직으로 기술직이 올라가는데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주요 정책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고 몇개 부처의 경우에는 전문기술관료가 없었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어떻게 행정에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떻게 개선이 되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아예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대비해서 최소한도 참모조직에는 기술에 관한 분야에서 장관을 보좌할 수 있는 스탭조직

이 꼭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 내부에서도 기술행정에 관한 한 깊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다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직 공무원이 있다 하더라도 대학에서 불과 2~3년 공부한 후 그 기술로 정부 내에서 전문가로 행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 내의 기술직이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바깥의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역할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은 과감히 아웃소싱으로 돌리고 이 전문기술관료들이라 하는 사람들은 그 아웃소싱 결과를 전혀 모르는 인문계 사회계 사람에게 적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정책결정의 보좌인으로 국한되어질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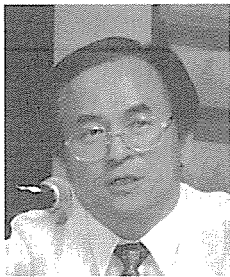
아울러 기존에 있는 기술공무원에 대해서는 제도상의 인사의 벽을 다 열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고시 등 채용과 관련해서는 민간 기업이 하는 것처럼 올해 정부에서 5백명이 필요하다하면 5백명을 전공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과목으로 뽑아서 그 다음에 한 1년간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을 시켜서 모두 똑같은 신분으로 출발하게 하고 다만 그 사람의 전공을 봐서 앞으로 기술이 많이 필요한 부분에는 이공계 출신을, 법이 필요한 부분에는 법대 출신을 배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아가 정부도 계속해서 공무원에게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시킴으로써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길을 더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행정직의 기술화’ 위한 교육 필요 지방자치단체도 과학담당 뒤야



권오마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국장〉

작년에 과학기술혁신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정부예산대비 R&D 투자를 3.9%로 정하고 그것을 2002년까지 5%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서 1차 추경, 2차 추경 하다보니 이것도 거꾸로 3.9%가 아니라 3.7%로 계속 내려가고, 이러한 상태에서 정부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을 통해 약 80%를 담당하는 우리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상당히 인력과 투자면에서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당장 IMF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 후의 우리의 국가 경쟁력, 국가 과학기술력을 어떻게 원래대로 회복시키느냐입니다. 과학기술 행정인력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경우 공무원을 채용할 때 우리처럼 각 고시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분야

별로 구분을 해서 28개분야 중에 21개가 과학기술분야로 전체 1천6백36명의 합격자 중에서 5백36명이 인문계이고 약 65% 정도가 과학기술분야 출신이어서 저도 상당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전문행정인력의 문제는 두가지로 구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행정직으로서의 문제 또 하나는 기술직으로서의 문제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도 조정해야

행정직으로서의 문제를 생각할때, 우리는 행정이라고 하면 ‘행정은 상식이다’ 라는 것은 뇌리에 담고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Generalist로서의 행정은 상식에 속하지만 현재의 행정은 상식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시대의 기술조류를 따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경쟁력, 또 삶의 질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행정직에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술적 측면에서도 단순히 기술적인 전문적 지식 뿐만 아니라 현재의 기술현황을 분석하고 또 미래의 기술을 예측하는 행정조정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부의 경우 제일 먼저 다른 부처와 다르게 사무관 특채도 많이하고 특히 각 분야별로 국장급 조정관이 있었습니다. 조정관을 각 출연기관에서 파견받아서 활용하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전문성 차원에서 파견받은 조정관이 상당히 능력도 있었지만 부내의 하나의 조직단위로 보았을 때에는 문제점도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적이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돈 부시교수 같은 사람은 한국과 일본을 망친 집단이 바로 관료집단이라고 했지만, 시대에 맞는 전문적인 관료집단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고 우리 국가의 과학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집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잦은 인사교체 문제입니다. 인사교체가 너무 잦아서 비전문화가 계속 초래되고 있고 특히 주무국장, 주무과장 그런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인사이동이 잦아서 행정직이든 기술직이든간에 여러 가지 비전문화문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21C에는 행정의 전문화내지 과학화가 필요한데 고시과목에 과학기술을 집어 넣는다는 문제에 공감을 표시하고 또 일본처럼 고시를 구분할 것이 아니라 고시부분 전체를 통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직이든 기술직이든간에 행정직의 기술화 또는 기술직의 행정화와 같은 측면에서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과학기술행정체제를 제대로 갖춘데도 있지만 거의가 제대로 과학기술 담당관 하나 없는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도 시급합니다. 현재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훈장의 독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1개 훈장이 있습니다. 국민훈장이라든가 산업훈장 등과 같이 과학기술훈장을 독립시키도록 노력중입니다.



토론

# 우리나라 기술직 공무원 25%뿐 분야 세분화...박사 등 특채 늘려야



李萬儀  
〈행정자치부 인사국장〉

현재 우리 공무원을 인문사회계와 자연과학계의 교육배경별로 나누어 보면 인문사회계 58.6%이고 자연과학계가 46.4%입니다. 다음에 행정직과 기술직 공무원의 통계는 여러 군데서 나왔습니다만은 현재 행정직, 공안직을 합해서 보면 75.5%이고 기술부문이 24.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급 이상 비율을 보면 행정직, 공안직 70.8%이고 기술부문 29.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적 배경에서 비추어서 볼 때 상대적으로 기술부문 공무원수가 적고 비중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급별로 보았을 때 하위계층에 몰려 있다는 또다른 문제를 아울러 검토해 보면 더 문제를 심화시켜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90년대 이후 소위 국가경쟁력문제가 공식적으로 또 국민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공직부문에서도 상당한

부문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직분류하는 체계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이 단순분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직류를 쪼개고 직렬을 여러개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기술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공직에 입문하신 분에 대한 우대조치를 통해서 역시 전문기술의 행정과의 접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박사학위 소지자에 대한 특별채용의 기회를 확대해서 최근 그와 같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도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자격증을 가진 분을 84명, 박사학위소지자를 1백1명해서 1백85명을 특별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가진 61명, 박사학위 소지자 30명 등 91명을 금년 7월 말까지 특별채용한 바 있습니다. 93년도 이후 지금까지 총 7백3명이 이와 같은 전문직으로 특별채용 되어서 공직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문은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 제도개선을 도모하고 또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봉급면에서도 그와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연구지도분야에 근무하게 되면 많지는 않지만 감안을 해드리

고 예컨대 금년, 내년 같은 경우에 다른 행정부문의 봉급은 전반적으로 삭감을 하는 추세에서도 기술부문에 대한 특별우대차원의 급여체계는 손을 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정보통신, 환경, 교통, 도시계획, 노동, 보건 등 10개분야에 5급 이상 직위를 개방형 전문직으로 지정을 해서 자격요건에 맞는 분을 우선적으로 충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1C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과학기술분야 전문기술의 활동영역을 확대해야 된다는 시점에 비추어볼 때 과거의 인사관행이나 제도가 매우 편협하거나 지극히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최근 들어서 많은 검토작업을 하고 특히 민간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해서 공동으로 계속 토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박사·기술자 등 1백85명 특채

그리고 고시제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 이제는 국가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두리몽실한 통합형 보다는 어느 한 부문에서라도 세계 일류를 지향해서 세분화 시키고 다원화 시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진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드리고 그 분들이 쉽게 공직부문에 들어와서 정책결정과 집행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길을 터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고시제도도 그와 같은 측면에서 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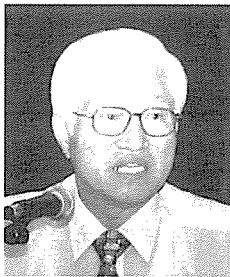
이나 직렬을 세분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옳지 못했그려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특히 정보통신분야의 여러 가지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직부문에 있어서도 역시 정보처리와 관련된 분야의 전공이나 자격을 가진 분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시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문제는 수요제기입니다. 많은 과학기술 인력을 뽑아 가지고 정부부문이라든지

국영기업체 등과 같은 공공부문에까지 공급하고 싶어도 해당 행정기관이나 또는 해당 공공단체에서 필요없다고 할 때에는 공급할 수 없습니다. 즉, 과학기술의 전문인력, 전문성을 많이 갖춘 분들이 그와 같은 행정서비스 내지는 국가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와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앞으로 계속 해주셔야 될 어떤 의미에서는 선도자적이고 선구자적인 과제라고 저는 그렇

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시해 주신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또 정부쪽에서 조치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이나 보완을 통해서 이 부문을 흡수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되 다만 사회 각 부문별로 이견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고 최대공약수를 찾아낼 수 있는 쪽으로 여론수렴이라든지 전문가 참여체널을 통한 조정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토론

## 구조조정때 기술전문직 늘리고 창조적 미래경영 형태로 개편을



李祥義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근에 우리가 구조조정에 몰두하고 있지만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정치부문의 구조조정과 행정·정부부문의 구조조정입니다. 그러면 정치하고 행정이 어느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미래경영입니다. 현실경영이 아닙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예측을 해두고 거기에 접근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가는 경영입니다. 또 창조경영입니다. 우리 정치와 행정이 미래경영과 창조경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된다는 점에서 기술인력의 필요성이 더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조직은 그런 시각에서 패러다임을 달리해서 네트워크조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Small Government가 됩니다. 그렇게 가는 길은 전자정부 뿐입니다. 그러면 그 전자정부에 대해 기존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관념을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Need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변하지 않으면 안되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제 각 직급에 따라서 철저하게 Job Description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법제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인력은 시장경제에서 훈련된 전문가가 Boardless로 정부로 들어갔다가 정부에서 일정기간 일한 후 업그레йд 시켜야 되겠다 싶을 때 나오고, 새로 업그레이드된 시장전문가가 들어가고 하는 이런 인사제도가 기본적으로 전자정부의 전문인력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은 법과 제도의 정비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정부서 상거래 방향 유도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분야가 전문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가지 예로 전자상거래가 앞으로

모든 경제권의 판도를 바꿀텐데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거래하면 일반거래보다도 월등히 유리하게 세제상의 혜택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전자상거래로 옮겨가게끔 유도를

해 줍니다.

우리는 그런 강력한 유인정책이 없습니다. 만약에 전자상거래에서 30% 싸다고 하면 자연히 주부가 컴퓨터 공부를 하게 되고 정보화가 됩니다. 이

렇게 되면 기술전문인력의 수요가 어쩔 수 없이 정부쪽에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기능도 창조적 미래경영을 하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건의

과총은 이번토론회에서 개진된 내용을 토대로 다음 건의문을 작성하여 정부 및 관련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건의문>

「과학기술 전문행정인력에 의한 국정운영」의 강화

현재 국가사회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과학기술이 국력을 지배하는 오늘날의 상황에 있어서는 과학기술부문 역량을 강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관련되는 정부의 행정요직에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대폭 기용, 배치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합회에서는 국회정보통신포럼과 국회기상정보기치연구회와의 공동주최로 지난 9월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과학기술 전문행정인력에 의한 국정운영이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개진된 주요내용은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운영주체의 모든 부분에 과학기술 배경을 가진 고급인력을 대폭 등용하여 공공봉사 부문에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이 특히 강조된 바 본 연합회에서는 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건의사항

1. 현행의 행정·기술고시를 통폐

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사회의 과학화는 임용과정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바, 현재의 고시제도로는 임용후 기술고시출신에 대한 승진·보직의 한계 등 불합리한 인사운영이 관행화되어 있어 행정·기술고시의 통폐합이 필요하며 현행 4대 고시과목에 과학기술관련 학과목을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2. 행정직과 기술직 공무원의 순환보직제를 과감히 실시하고 모든 국가기관의 고위직급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더욱 많이 임용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 공직자사회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적극 배치함은 물론 외부의 고급인력을 유연하게 수용하여야 합니다.

3. 과학기술자들이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의 우수한 교포 과학기술자들이 국내에서도 그들의 연구개발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해외교포 2세를 육성, 활용하기 위

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중국적 허용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4. 인사선정위원회를 통한 임용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 관련부처의 고위직 및 산하연구기관 기관장 선임 등에 있어서 인사상의 공정성 확보와 해당기관의 업무수행, 경영목표 달성에 최적의 인사가 선임되도록 해야 합니다.

5. 공무원 재직기간중 지속적인 과학기술 소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과학기술력이 국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서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속에서 공무원 자신의 능력배양은 물론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종래의 형식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과학기술 소양교육을 제도적으로 대폭 강화시켜야 하며 특히 핵심적 정책입안과 계획수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공무원은 과학기술 소양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